

근대 한국정치학과 ‘정치’ 인식의 불연속성: 전통적 총체성의 상실

장현근 | 용인대학교

| 논문요약 |

이 글은 한국의 정치학이 담보와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독자적인 이념이나 제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학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정치학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전통 정치학의 부정과 서양 정치학의 일방적 수용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치’의 참된 의미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 2절에서는 전통시대 ‘총체성’으로서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근대 한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치학이 분과학문으로 전락하였는지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정치가 어떻게 부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근대 한국 정치학이 권력 창출에 대한 논의에 편향된 경향을 비판하였다. 결론에선 한국 정치학의 뿌리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학을 성취해야 한다는 주문과 권력을 넘어서 인간적인 삶의 총체로서 새로운 한국 정치학의 재건축을 주문하였다.

I. 머리말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와 정치학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다. 소위 절차적 민주화를 이룩한 1987년 이후 한국정치는 적어도 민주주의 방면에서 큰 진전을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를 다루는 한국의 정치학은 담보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학자의 수는 양적으로 늘어났으나, 정치를 보는 시각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모든 정치적인 것에 민주주의만을 획일적인 규칙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안창출은 고사하고 주변 나라의 관심을 끌만한 독자적인 정치이념이나 제도적 성취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선 그렇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로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치인들을 경원시하거나 조롱거리로 삼게 된 것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국의 정치학 연구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정치를 온전히 버리고, 서양의 정치학을 일방적으로 지향함으로써 모래 위에 한국 정치학이란 새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 집 나뭇대로의 특수성과 성과도 있었지만, 근대 한국의 정치학은 과거의 일체의 정치적 경륜을 부정하고 ‘총체성’으로서 정치를 인식하던 전통적 맥락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우 세분화된 분과 학문으로 전락하다가 선거나 정당 등 권력창출과 연관된 논의만을 정치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 정치학 연구의 토착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미래적 대안을 모색하는 길을 정체성의 회복에서 찾고, 정치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현대적 관념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물론 그동안의 한국 정치학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현대 정치학이 태동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유길준이 현대적 의미의 『정치학』을 출간한지 백 년이 넘었으며(이흥구 1986), 정치학을 전공한 안국선이 『정치월론』을 출판한지도 백 년이 넘었다(김학준 1987). 독립된 학문분과로서 대학에서

정치학과가 생겨나고, 특히 1953년 한국정치학회가 성립한 이래로 한국정치학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한국정치학 연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많은 시도를 해왔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60년대(서중석 1967; 구범모 1967; 민병태 1969 등)를 지나 70년대(김영국 1977; 김운태 1978; 문승익 1979 등)를 거쳐 80년대(서정갑 1982; 이홍구 1986; 안청시 1986; 김계수 1987 등)에 더욱 늘어났고, 90년대(김호진 1994; 김계수 1995; 김석근 1997; 김용진 1997; 김동춘 1998 등)엔 정체성이라는 질문 자체에 대한 논쟁과 한국정치학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날카로운 설전도 있었다. 김학준(1983; 1987; 2000 등)은 이 문제의식에 대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학문적 성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정치학회가 50년을 넘긴 2000년대도 이어져(신정완 2003; 정영태 2003; 김영명 2006; 조희연 2006 등) 우리 안에서 정치학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정치학 연구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은 서병훈(2000)의 질타처럼 끊임없는 재탕이거나 원론수준의 방향제시 정도에 불과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서양 특히 미국정치학에 종속되어가는 한국정치학의 문제점을 늘 반성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체성 혹은 독자성을 모색하려는 고민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정치학일반에 대한 연구를 둘러싼 이러한 정체성논쟁과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는 강정인·정승현(2010)의 글에 매우 잘 분석되어 있다. 또한 2003년에 한국정치학회가 출간한 『한국정치학회 오십년사』에는 분야별로 위의 논의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 연구들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시도를 하였다. 우선 '정체성'과 '주체성'이란 측면에서 한국 정치학의 뿌리를 현대 정치학이 들어오기 전의 의미와 현대 정치학이 들어온 뒤의 의미의 연결선상에서 찾고자 한다. 둘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서양에서 온 개념인 'politics'로서 정치를 인식하기 전에 유교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시대¹⁾ 지식인들에게서 '정치(政治)'는 어떤 의미를 지니

1) '전통시대'라는 용어는 이 글이 다루는 '근대정치학'의 근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근대

고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대 정치학을 수용하고 국가건설을 해가던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비교해봄으로써 ‘정치’를 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이 어떤 단절과 괴리를 갖게 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두 번째의 다른 시도는 ‘단절의 극복’과 ‘전통과 현대의 연속성’이다. 한국적 정치학의 뿌리를 기존의 논의들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 살펴보되, 서양 정치학의 수용을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통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었고, 그것은 한국인의 내면 의식과 한국 정치학의 연관관계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한국 정치학을 서양 정치학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주체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치학 용어와 내용들의 서양지향성이나 오리엔탈리즘의 위험성을 뛰어넘어 한국인의 역사성과 의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성’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²⁾ 전통시대의 정치든 현대의 정치든 ‘왕정과 민주’라는 정치체제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정치행위를 해왔다. 그럼에도 왕정시대의 정치를 정치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도외시해온 한국정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행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근대한국정치학의 뿌리가 뒤틀린 인식에 기반을 두었기에 정체성과 주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적(혹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모든 시대를 전통시대로 명명한다. 또한 한국 정치학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범위는 한반도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당위’로서 인식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선상에 놓고 본 한국이다.

- 2)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는 김영명(2006)처럼 우리말로 정치학하기의 시도도 있으며, 정약용을 정치사상의 원조, 최한기를 국제정치학의 원조 등으로 비정하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배병삼 2003)도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양 정치학의 개념을 전통의 특정한 인물과 상황에 빗댄 논의여서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근대한국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환: 총체에서 분과로

1. 전통시대의 '정치': 총체성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를 사용하여 중요한 개념어를 표현하고 규정해왔다. 그런데 한자는 한 가지 물건(물질)에 대응하여 하나의 글자를 갖는 일물일자(一物一字)의 원칙이 있으며, 따라서 한 글자는 반드시 하나의 뜻을 드러내는 일자일의(一字一意)의 원칙을 지킨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치(政治)'라는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된 단어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는 '정(政)'과 '치(治)'라는 글자를 합하여 부른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치(治)자는 고대 하천의 이름³⁾에서 비롯된 형성(形聲)문자였다. 나중 음을 빌어서 '우임금의 치수(治水)' 등으로 쓰였으며, 옥결(理)처럼 잘 다듬어지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뜻하게 되었다. 치료(治療), 치학(治學), 치국(治國) 등 광범위한 용례를 갖고 있다.

정(政)은 바를 정(正)자와 두드릴 복(支)자의 회의(會意)문자이기도 하고 형성문자이기도 하다. 고대엔 정(政)자는 정리정돈을 뜻하는 정(整)자와 통용되었다. 정(正)자는 원래 정벌한다는 정(征)의 본 글자이다. 갑골문엔 행군한다는 의미의 止(止) 위에 음성을 뜻하는 口(口)자를 덧붙인 글자로서 마을 위를 행군해 질서를 잡는다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갑골문 政(政)은 그 정(正)자 오른쪽에 기구를 들고 두들겨 공격한다는 攴(攴)자를 붙여 무력으로 정복하여 힘으로 통치를 행한다는 뜻이다.⁴⁾ 금문과 소전은 갑골문 자형이 조금씩 바뀐 것이다.

『묵자』(墨子)「천지상」(天地上)편에 “반드시 위사람을 좇아 아랫사람을 정(正)한다.”⁵⁾고 함이 원뜻에 가깝다. 그리하여 정벌(諸侯力政: 『大戴禮記』「用兵」), 세금

3) 治, 水. 出東萊曲城陽丘山, 南入海. 治는 원래 중국 산둥성 東萊(오늘날 龍口市)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 이름이었다.

4) 이상 政(政)에 대한 해석은 《상형자전》(象形字典, <http://vividict.com/WordInfo.aspx?id=3716>)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庶民弛政: 『禮記』 「樂記」), 정책 또는 법령(先王之政: 『韓非子』 「五蠹」), (정치 교화(其政不獲: 『詩經』 「大雅·皇矣」), 심하게는 책략(下政攻城: 『孫子』 「謀攻」)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政에 대하여 가장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책이 『논어』이다. 몇 구절만 비교해보자.

공자가 말했다. “정(政)으로 이끌고 형(刑)으로 질서를 잡으면⁶⁾ 백성들이 (법망만을) 피해가며 부끄러움이라곤 없는데, 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 질서를 잡으면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바르게 된다.”⁷⁾

(「爲政」편 3장)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얘기했다. “선생께선 어째서 정(政)에 종사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서경』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정(政)은 그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政)에 종사하는 것인데, 어찌 (정무에) 종사해야만 정(政)을 하는 것이겠습니까?”⁸⁾

(「爲政」편 21장)

공자가 말했다. “역지행위 없어도 치(治)를 이룬 사람은 순임금이었겠지? 어떻게 했느냐면, 스스로를 공손히 한 체 바르게 남면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다.”⁹⁾

(「衛靈公」편 5장)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시대의 정치에 대한 사유의 기본을 형성하게 해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서적이 『논어』이다. 『논어』엔 정(政)자는 43회 출현하고, 치(治)자는 6차례 출현한다. 위 인용문에 보이듯 정(政)은 오늘날 용어로 번역하자면, 국가(또는 각급 조직)의 행정, 각종 정무(혹은 정책입안 등)에 종사

5) 必从上之政下.

6) 齊는 같게 만들다, 가지런히 하다 등의 의미로 정치와 관련된 이 문맥에선 질서를 잡는 것으로 해석한다.

7)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8)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 ‘孝乎惟孝·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政?”

9)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하는 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질서를 바로잡는 일 등을 말한다. 치(治)는 그렇게 하여 질서가 잡힌 상태를 뜻한다. 치(治)의 최고 상태는 순임금의 통치와 같은 이상적인 경계를 말하는데, 공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刑)·덕(德)·예(禮)·정(正) 등을 모두 치(治)의 질서상태에 이르는 (정치적)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정(政)을 오늘날 용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정치, 행정, 정무, 정사, 정령(政令), 정책, 정부 등이다. 공자는 형벌에 의한 질서를 예에 의한 질서보다 하위가치로 보고 있으며, 같은 논리로서 그 자신의 이념적 총강령인 덕(德)을 정(政)의 상위가치로 상정한다.

어찌 되었든 다양한 인간사회의 관계망 속에 질서를 생각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와 대동소이하다. 정치에 대한 오늘날의 사전적 정의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¹⁰⁾ 고 한다. 위의 공자가 생각한 정(政)의 범주와 적절히 결합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양의 경전들은 대부분 『논어』·『맹자』와 유사한 정치학 교과서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스려진 상태, 질서가 이루어지는 치(治)의 달성을 위해 정(政)을 포함한 무수한 정치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다스린다’는 의미의 한자만도 수십 글자가 넘는다.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수(修)·제(齊)·치(治)·평(平)이 그렇고, 예(父)·리(理)·발(撥)·청(聽)·관(管) 등이 그렇다. 특히 유가사상의 경우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나 학(學)·문(文)과 효(孝), 심지어 예(禮)·악(樂) 또한 치(治)에 이르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학적 탐구대상들이다. 군자(君子)는 그러한 ‘총체’ 적 덕목들을 한 몸에 갖춘 위대한 정치가의 표상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것’ 들을 다룬 경전을 읽고 외워 관료의 길에 들어섰던 전통시대의 지식인들은 총체적인 것으로서 삶과 인간관계의 완전한 질서체계로 정치를 생각하면서 ‘정(政)의 치(治)’ 를 위한 군자를 지향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1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809400>(2012년 2월 20일 검색).

‘정(政)의 치(治)’ 상태를 얘기하는 ‘정치’ 라는 단어는 초기의 경전과 사서 및 제자백가의 서적에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 『서경』 「주서(周書)·필명(畢命)」편엔 “도가 정치(政治)를 흠족케 하고, 은택이 생민을 윤택케 하다”¹¹⁾고 한다. 통치자가 도의에 입각해서 행동하면 정(政)은 넉넉히 치(治)의 상태에 이른다는 뜻이다. 『주례』(周禮) 「지관(地官)·수인(遂人)」편에 경작지를 관리하는 수인이란 관직을 설명하면서 “... 하여 그 정치금령(政治禁令)을 관장한다.”¹²⁾고 한다. 정(政)이 치(治)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정적 조치들이란 의미다. 특히 교육과 교화의 정치적 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가의 정치학은 ‘정(政)을 치(治)’ 하게 하는 관건으로서 통치자의 교화능력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런 유가사상의 ‘정치’ 개념을 한(漢)대의 천재 가의(賈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백성은 제후의 근본이고, 교화는 정(政)의 근본이며, 도는 교화의 근본이다. 도가 있는 연후에 교화가 이루어지고, 교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정(政)이 치(治)되며, 정(政)이 치(治)된 연후에 백성이 그것을 권면하게 되고, 백성이 서로 권면하게 된 연후에 국가는 풍성하고 부유해진다.”¹³⁾(『新書』 「大政下」편)

총체적인 것으로서 삶과 인간관계의 완전한 질서체계로 정치를 생각했던 유교적 사유¹⁴⁾는 현대적 의미의 ‘정치학’이 들어오기 전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몇 가지 예를 보자.

(태조실록) “원컨대 지금부터는 각도의 수령들이 민생의 휴척과 정치(政治)의 득실 및 백성들에게 이익을 더할 수 있고 해를 덜어줄 수 있는, 사실대로 글월로

11) 道治政治，澤潤生民.

12) 掌其政治禁令.

13) 夫民者，諸侯之本也；教者，政之本也；道者，教之本也。有道然後教也，有教然後政治也，政治然後民勸之，民勸之然後國豐富也.

14) 漢나라 때 王充은 더 나아가 ‘제 몸의 질서를 잡는 것’도 정치와 연결시킨다. “(물질과) 몸의 변화는 氣에 따르는데 마치 ‘정치’에 응하는 것과 같다(『論衡』 「無形」, 物之變隨氣，若應政治).

봉해서 바로 주달하게 하여 (민정이) 가리고 막히지 않게 하소서.”¹⁵⁾

(세종실록) “70, 80 이상의 노인을 모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관계하지 말고 향연 하도록 하여, 성상의 양로하는 은혜를 넓히도록 할 것이요, 또 그들로부터 좋은 말을 구하여 정치(政治)에 시행하도록 하면 인륜이 두터워질 것이며, 풍속도 바르게 될 것이요, 천도가 순하게 되고 음양이 고르게 될 것이다.”¹⁶⁾

(정조실록) “그리하여 진정한 도에 합치되고 정치(政治, 원 번역문엔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참으로 대도(大道)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강령이 거행되고 조목별로 펼쳐져서 예전의 어떤 정(政, 원 번역문엔 정사)보다 안정되기에 이르렀다.”¹⁷⁾

태조, 세종, 정조에 이르는 시기까지 정치 개념을 보는 입장은 위의 전통시대 정치에 대한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인(日人)과 아라사(俄羅斯)¹⁸⁾의 횡포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비록 나무꾼이나 촌사람 같은 하찮은 이의 말이긴 하나, 정치(政治)하는 데에 만의 하나라도 보탬이 될지 모르겠기에

15) 太祖 8卷, 4年(1395 乙亥 / 명 홍무(洪武) 28年) 11月 28日(戊子) 2번째 기사. 간관 이정견 등이, 매 아일 조희 뒤에는 대신 및 여러 관리들로부터 국정을 상세히 보고받을 것을 아뢰다. “願自今, 各道守令, 將民生休戚、政治得失及可興利除害者, 實封直達, 毋得壅蔽.” 번역은 매우 상세하고 꼼꼼하게 전자문서 구축에 성공한, 국가편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합작품인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를 참고하였는데, 필자가 생각한 만큼 한국정치학이 뿌리를 가진다면 ‘政······’에 대한 번역어가 새롭게 다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16) 世宗 10卷, 2年(1420 庚子 / 명 영락(永樂) 18年) 11月 5日(己巳) 3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擇七十、八十以上, 勿拘貴賤, 聚而饗之, 以廣聖上養老之恩. 且乞善言而施諸政治, 則人倫厚而風俗正; 天道順而陰陽和矣.”

17) 正祖 52卷, 23年(1799 己未 / 청 가경(嘉慶) 4年) 10月 12日(丁酉) 2번째 기사. 축하 예물을 올린 것에 대한 봉천 승운 황제가 반사한 조서. “道治政治, 允升於大猷, 綱舉目張, 以庥於前政.”

18) 러시아를 뜻함. 이 용어는 실록에선 고종 때 처음 등장함.

감히 이렇게 진달 드리는 것이니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¹⁹⁾라고 한다. 여전히 총체로서 도덕교화로서 정치를 언급하고 있다.

2. 근대의 정치: 분과성

총체로서 정치를 인식하던 전통은 근대에 들어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예컨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한 해였던 1882년에 오면 “근래타 국정치(近來他國政治)”²⁰⁾ 등 현대적 의미의 ‘정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고종실록』에는 이 후 여러 차례 ‘정치(政治)’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체로 유학자들은 전통시대의 ‘정치’ 의미에 천착해 있고,²¹⁾ 일본이나 미국을 다녀온 개화적 지식인들은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혼용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것으로서 정치에서 ‘분과’적인 것으로서 정치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컨대 1889년 고종이 미국주재 전권대신으로 있다가 돌아온 박정양(朴定陽)을 면담할 때 박정양은 정치와 법률을 구분시키고 있다.

박정양이 아뢰기를, “일본 사람들이 각 국에 왕래하면서 정치(政治)와 법률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모방한 것이 많습니다.”²²⁾

그러나 고종은 여전히 총체적 덕목이자 위정자 혹은 군자가 도달하려는 가장

19) 高宗 16卷, 16年(1879 己卯 / 청 광서(光緒) 5年) 1月 24日(戊辰) 1번째 기사. 권중록이 현재의 폐단에 대하여 상소를 올린다. “此雖蕪蕪之說、丘里之言、或有補於政治之萬一。”

20) 高宗 19卷, 19年(1882 壬午 / 청 광서(光緒) 8年) 11月 18日(庚子) 3번째 기사. 대궐 안에 내무 아문을 설치하도록 명하다.

21) 예컨대 최익현은 당시의 민습을 극악무도한 패역으로 몰아붙이며 올바른 政治를 전통시대 유학자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高宗 45卷, 42年(1905 乙巳 / 대한 광무(光武) 9年) 1月 7日(陽曆) 2번째 기사. 의정부 찬정 최익현이 정사에 대한 차자를 올린다.

22) 高宗 26卷, 26年(1889 己丑 / 청 광서(光緒) 15年) 7月 24日(戊辰) 1번째 기사. 미국주재 전권 대신으로 있다가 돌아온 박정양을 소견하다. 定陽曰: “日本人往來於各國, 政治法律, 棄短取長, 多有倣行矣.”

높은 가치로서의 전통시대 '정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갑오경장이 있던 1894년 6월 11일 고종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자주 일어나 분발하고 가다듬어 정치(政治)를 일신하려는 생각에서 어제 하교한 것이니, 모든 신하들도 마땅히 깊이 반성하고 나의 뜻을 선양할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²³⁾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탈과 대외 개방을 하던 고종 시대에는, 깊은 학문적 수양을 통해 도를 체득하고 수기치인의 군자가 됨으로써 정(政)의 치(治)에 도달한다는 총체로서의 전통시대 '정치'와 일본이나 미국을 다녀온 또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 분과로서의 근대적 '정치'가 혼재했으며, 이로부터 '정치'의 전통적 의미와 근대적 의미가 전환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이 '정치'라는 단어의 출현은 대부분의 우리 개념어가 그렇듯이 근대 일본의 학자 니시 아마네(西周)와 관련이 있다. 니시 아마네는 막부의 명으로 1862년에 홀란드에 유학한 뒤 막말(幕末)인 1867년 11월 『의정초안상』(議題草案上)을 기초하면서 그 가운데 「정부지권지사」(政府之權之事)라는 부분에서 영어 politics의 번역어로 '정치(政治)'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어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72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학문의 권유』(學問ノス、メ)에서 몇 차례 글을 통해 politics의 번역어로서 '정치(政治)'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더니, 이후 많은 글들을 통해 서구의 politics가 갖는 우수성과 선진성을 강조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정치(政治)'라는 한자용어로 일본에 뿌리를 내렸다.²⁴⁾

한국에서 근대 초기의 개화론자들인 유길준, 박영효, 윤치호 등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후쿠자와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다.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정치' 개념을 도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한문 훈련을 받은 이들은 한문이라는 동질성에 간혀 일본식 한문, 혹은 번역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한문 개념어와

23) 高宗 31卷, 31年(1894 甲午 / 淸 光緒 20年) 6月 11日(丙辰) 1번째 기사. 교정청은 설치하라고 명하다. “子則懼然警惕, 一榻屢興, 思欲奮發淬礪, 一新政治, 所以有日昨之教. 凡百臣隣, 亦宜有猛省而求盡對揚之責矣.”

24) 이상 石塚正英·柴田隆行 監修, 『哲學·思想翻譯語事典』(東京: 論創社, 2004 초판 2쇄), 174-175쪽 참조.

전통 한문 개념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천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글 어디에도 두 ‘정치’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그들은 서구의 근대적 정치제도에 대해 감동을 표시하면서도 서구에서 말하는 ‘정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도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을 통해 이 영향을 받았으며, 1890년 주일 공사관 참찬관이었으며 김홍집에게 『조선책략』을 주기도 했던 황준헌(黃遵憲)이 쓴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에 보면 “문학(文學)은 두 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치학(政治學) 및 이재학과(理財學²⁵)요 둘은 화한문학과(和漢文學科)이다.”고 한다. 여기서 정치학은 영어 politics의 번역어이다. 1897년 《사상교육》(思想教育)이란 잡지에선 정치학 대신 ‘정학(政學)’이란 용어를 쓰며 서양이름을 음역하여 파립특(波立特, politics)이라고 하였다.²⁶⁾ 이후 일본인이 번역한 서양의 정치학 관련 서적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중역(重譯)되어 소개되었으며, 근대적 의미의 분과학문이 되어버린 ‘정치’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아마도 한국에 근대정치학을 소개한 최초의 세대로 여겨지는 유길준과 안국선 등에 의한 초기 서양 정치학의 소개 또한 이 과정의 하나로 여겨진다. 김학준은 “우리나라 정치학 도입기의 지도적 정치학자들로 우리는 흔히 유길준과 안국선 및 안확의 세 사람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한말(韓末)에 태어나 일본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것에 기초해 정치학 저술을 남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정치학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전공한 이는 안국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해외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정식으로 공부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학 저술을 출판한 사람이다.”(김학준 1987, 234)²⁷⁾고 한다. 그러나 안국선은 전통적 ‘정치’ 관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25) 理財學은 경제학을 말하며, 富國學이라고도 했음(梁啓超, 飲水室合集, 文集 1, 71에 보임).

26) 이상 香港中國語文學會, 『近現代漢語新詞源詞典』(香港: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년 3월 2쇄), 337-338쪽 참조.

27) 유길준의 『정치학』은 독일의 정치학자 Karl Rathgen이 東京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한 책을 유길준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 책의 일관된 이론은 독일의 정치학자인 Johann Kasper Bluntschli의 국가유기체설이라고 한다(양승태 2011, 496).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식 근대화를 찬양하고 서양의 정치를 체(體)로 생각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분과학문적 인식 그 이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그의 『정치원론』은 저서가 아니라 역서로 판명되었다(양승태·안외순 2007, 126-128).

“미완성의 저술로서 1907년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보>(萬歲報)에 그 일부가 최초로 게재된”(양승태 2011, 495) 유길준의 『정치학』은 오늘날 정치학개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 주자학 교육을 받았던 유길준임에도 '정(政)의 치(治)'란 입장에서 총체적인 것으로서 정치를 파악하지 않고, 분과학문의 하나로 정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쿠자와 류의 일본에서의 서구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유견문』 등 그의 저술에는 『사서집주』 등에 나타나는 주자의 용어를 수없이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길준은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정치적(또는 정치학적)으로는 주자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유길준은 '정치' 개념의 동서양 차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동서양 정치사상의 공통된 주제인 공권력 또는 강제력으로 표상되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 유길준이 서구적 의미의 『정치학』을 저술한 것은 '소개'의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문적 탐구를 본업으로 하지 않았던 유길준의 경우 일본에서 풀려나와서 고종 앞에 엎드려 '시대의 죄인'을 운운했듯이,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한계를 껴안은 체 분과로서의 '정치'를 소개했을 것이다(안외순 2008).

그렇게 보면 안국선의 경우도 친일을 했지만, 그 또한 1900년을 전후해 발표한 『정도론』(政道論, 1897)이나 『정치가』(政治家, 1907)에서 “‘정치가’는 ‘정치에 속달해 환히 통하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치가의 역할’은 실질적인 일을 행할 것, 공성(公誠, 공적인 일에 정성을 다함)을 다할 것, 시세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양승태·안외순 2007, 130)고 하는 등 치국의 도, 치국평천하 등 전통적 정치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전통적 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신식 교육으로 시작하여 일본유학을 통해 근대 서양적 '정치'를 정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출발했다거나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탈이라는 한계 때문에 무엇이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인가에 대한 고민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길준이나 안국선보다 한 세대 늦은 서양 정치학 수용의 두 번째 세대인 안확의 경우는 전통과 근대의 접목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나름의 조선정치사에 대한 독법은 일차적으로는 ‘근대정치’만을 ‘정치’로 인정하던 당대 지식인들의 사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안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대정치’가 타자에 의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조선민족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리고 과거 조선 정치전통의 계승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음을 논증하는 작업을 하였다(안외순 2008, 254).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결국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한국정치학은 총체적인 것으로서 전통적인 ‘정치’의 의미를 상실하고 근대 서구적 의미에서 분과학문의 하나로 ‘정치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전통시대와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이렇게 총체로서의 ‘정치’를 생각하지 않게 된 정치학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공간을 넘어 현대로 오면서 “미국 역사 및 정신사가 특이하게 반영된 현대의 미국 정치학”(양승태 2011, 500)의 수용시기를 거쳐 더 세밀한 분과학문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행태주의 정치학만을 정치학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정치학이 갖고 있는 총체성에서 더욱 더 멀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날의 한국정치학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8) ‘이전의 정치’는 정치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저 세습왕조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행위쯤으로 치부되었다. 요컨대 철저한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 곧 자기 부정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안외순 2008, 237).

III. 전통의 부정과 정치권력 창출 논의에의 편향

'총체'로서 통합학문인 정치학이 '분과'로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작은 한 분야로 인식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과학문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동양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제국주의 침탈이라는 시대적 한계, 민족과 국권의 위기를 두고 모든 것을 민족주의의 하위개념에 두게 된 상황, 구체제 질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신학문에 대한 지식인들의 개혁적 경향, 맹목적인 근대지향 혹은 팽배하는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 등이 복합적 증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²⁹⁾

철종 8년(1857년) 최한기(崔漢綺)는 일종의 세계지리소개서인 『지구전요』(地球典要)를 간행하였는데,³⁰⁾ 영미의 의회 등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서양이 독자적인 정치세계를 성취했다고 평가하면서, 유교문명의 성인정치(聖人政治)에 못지않다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통 유학을 체(體)로 삼았던 그는 서구 대의체제에 대해 어떤 위축감이나 열등감을 보이지 않고 각각의 정치구조는 각국 실정에 맞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였었다(안외순 2008, 239). 하지만 최한기의 논의는 시대상황의 한계 때문에 주의를 끌지 못하고 책 속의 주장으로만 묻히고 말았다. 그리고 제국주의 외세의 압력, 개화논리, 국권의 침탈 과정, 서구지향적 근대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서구 정치학이 체(體)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개화파 지식인들이 '자아준거적' 정치학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전통 정치학과 신 정치학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연속성

29) 이러한 증충적 이유 때문에 근대중국 최고의 이론가이자 정치가로 평가되며 스스로 중국의 전통을 내면화시켰다고 자부하는 孫文의 경우도 정치를 분과의 하나로 인식하는 한계를 보였다. 손문은 정치를 '못 사람을 관리하는 일(管理衆人之事)'로 보며, civil power를 政으로 government power를 治로 정의하면서 중국전통정치사상은 統治라고 주장했는데(『三民主義』「民族主義 第六講」), 전통시대 총체로서의 정치의 진정한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30) 이에 대해선 노혜정 2005, 『지구전요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사상』(서울: 한국학술정보)이란 전문서가 있다.

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서구정치학의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정치학의 개념으로 전통시대 정치학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반대로 전통적 정치를 고수하려는 위정척사파는 그들의 논리로 새롭게 도입된 정치학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 고민을 했는가?

적어도 정치학은 권력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개화와 지식인들이든 위정척사파든 그들은 모두 정치권력이라는 연결고리를 고민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와 ‘권력’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공권력, 강제력, 영향력 등은 정치학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정치학이든 동양의 정치학이든 기본적으로 권력을 둘러싼 논의를 기본으로 다루어왔다. 위 유길준의 『정치학』에도 ‘국권(國權)’이란 말로 국가권력을 다루고 있으며, 안국선의 『정치원리』에도 “상(上)에는 하(下)를 다스리는 권(權)이 있다”며 권력론으로 출발하고 있다. 안학은 『조선문명사』(朝鮮文明史, 一名 朝鮮政治史, 1923)에서 군주의 전제 권력을 비판하면서 근대정치의 성질로 인민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대안으로 수용한 서구정치학은 대의제와 민주정체라는 ‘정치권력의 창출’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확실히 전통시대 동양 또는 한국의 정치학은 군주전제의 왕정체제하에서 ‘정치권력의 창출’은 다루어선 안 되었고, 다루지도 않았으며, 다룰 수도 없었다.³¹⁾

따라서 민(民)이 주(主)가 되어 선거 등 수단을 통해 정치권력을 창출해내는 대의제 원리나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치학이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정치학에서 권력은 창출, 유지, 확대, 변동 등 질서, 즉 치(治)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창출’을 제외한 모든 권력담론은 하위 가치로 전락하며 도외시되기에 이르렀다. ‘창출’을 담고 있지 않은 전통시대 정치에 대한 관념은 통째로 부정되었다. 특히 1896년 이후 1910년까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근대 정치체제 도입을 위한 애국계몽기를 거치면서 쏟아낸 담론들과

31) 물론 동양의 정치학 틀 내에 革命論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례』 등 권력의 창출과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중봉기나 반란이 아닌 형태로 ‘왕조’ 정치체제 내에 살아가면서 ‘政의 治’에 관해 논의하면서 ‘정권의 전복이나 창출’은 나타난 정치현상일 수는 있어도 연구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지향이 “서구세계는 ‘문명세계’ 인데 반해 조선적인 것은 ‘야만세계’ 로, 또 서구 근대정치의 핵심이었던 근대 정치체제는 보편적인 ‘정치 자체(the politics)’ 인데 반해 조선 기왕의 정치는 ‘부정해야 할 어떤 것’ 으로 인식되었다”(안외순 2008, 240).

특히 국권이 상실된 이후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씨’ 왕조는 무의미했으며, 지배권력으로서 총독부는 역사의 왜곡을 통해 조선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도 일본의 새로운 것에 따르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는 데 혈안이었다. 그렇게 반세기가 흘렀다. 한국의 전통정치에 대한 부정은 한국의 민족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로 규정한 박정희의 논의에서 그 극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약자시하고 남을 강자시하는 비겁하고도 사대적인 사상, 이 고질, 이 악유산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자주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 버려야 옳을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린다.³²⁾ 이는 조선시대 말부터 근대 한국의 산업화를 완성해가는 시점, 즉 근대한국정치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개화지향, 서구지향의 한국인들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일체의 전통을 부정하고, 총체로서 정치를 보는 전통시대의 정치학을 상실한 채 서양 근대사상의 일부에 불과한 ‘정치권력의 창출’에 관한 대의민주주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근대한국정치학의 왜곡상은 세 번의 뒤틀림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서양의 유입과 일본의 침탈을 겪는 과정에서 전통 정치학과 서구 정치학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에 뿌리를 둔 새로운 ‘정치’의 체화 또는 내면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서양의 정치학만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국권의 상실’이란 일제에 의한 강제합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정권, 즉 전통적인 정치에 죄를 묻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민족의 독립이라는 지상과제는 전통과 근대의 접목을 통한 주체적인 정치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여유는 없었으며, 무비판적 혹은 맹목적으로 서양, 혹은 서양을 닮는 데 성공한 듯 보이는 일본을 추종함으로써 해답을 얻고자

32) 이상 양승태 2010, 351-352에서 재인용.

했다. 세 번째는 주체적이지 못한 해방을 맞은 이후 정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할 시간도 여유도 능력도 없이 새로운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수립은 전통정치의 어떤 내적 유산과도 연계를 갖지 못한 채, 어떤 토론과 정도 갖지 못한 상태로 주어진 혹은 강요된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보편적인 서양정신사의 연속태가 아니라 특수한—의 눈을 통해 보는 ‘정치’에 대한 관념이 그대로 한국에 이식됨으로써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은 한 번 더 뒤틀리게 되었다.

이 세 차례의 큰 파고를 거치는 근 백여 년 동안 근대한국의 정치학은 ‘권력의 창출’ 문제에만 몰입해버림으로써, 전통시대 ‘총체’로서의 정치는 더 이상 탐구되지 않게 되었다. 민주화투쟁을 포함하여 정당, 선거,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등 정치학 제 분야는 미국학문의 수입과 재생산을 거듭하며 더욱더 작은 학문분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통시대 정치학의 중요한 분야였던 경제(經國濟世 혹은 經世濟民의 학문)가 떨어져나가고, 법(法)과 갈라서고, 행정(行政)도 독립하고, 오늘날은 심지어 정책학이나 국제관계학마저 다른 분과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더 작게는 대학 커리큘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정치제도’는 그 제도가 형성 또는 정립되기까지 무수한 정치적 담론과 쟁론을 거쳐 ‘정치’에 대한 사유를 진작시키고 현실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중요한 정치학의 구성인자임에도 한국의 어느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도 ‘정치제도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정치사’도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³³⁾

33) 정치학 전공 전임교수가 15명이 넘는 주요학교를 보면 정치제도나 정치사와 관련된 유사 교과목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타 대부분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는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표(2009년 개정)에선 정치학 분야를 정치이론 및 사상, 비교정치, 정치경제, 지역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6분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3분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 한국정치 4분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정치사상, 정치학방법론, 비교정치, 정치과정, 국제정치 5분야로 나누고 있다. 각 대학의 특성과 정원 차이에 따라 개설교과목의 차이가 크고 학교마다 정치학의 분류를 따로 하고 있으나, ‘정치’의 본질 또는 이상과 역사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으로서 정치를 다루는 교과목은 주요 대학이 20% 전후하여 개설하고 있을 뿐, 그 외 대학은 90% 정도가 현실 정치권력과 관련된 교과목들이다.

백여 년 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조선왕조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수백만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인구를 5백 년 이상 안정적으로 통치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인문학의 영역에선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행해왔으며,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성장하였고 독자적인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 일부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역사학분야에선 '정치제도사' 및 '정치사'를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하여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반면 제도의 수립이나 정치의 전개가 복잡다단한 인간(人間)의 관계망 속에서 갈등과 논쟁과 투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다양한 관계의 행위를 탐구하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본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과학은 어떤 분야에서도 전통시대의 정치제도나 정치사를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학의 주체성을 운운하며 재탕을 거듭하며 한국정치학의 위기와 정체성 찾기를 강조한 위에 언급한 술한 정치학 대가들이 재직할 바로 그 대학들조차도 전통을 강조하는 수업을 없앴거나 없애고 있다.

정치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는 총체적인 학문이며, 따라서 도덕적 성취와 인간의 완성,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럼에도 현대 한국의 정치학은 정치권력 창출과 유지 및 확장만을 다루는 학문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타 학문영역의 사람들은 정치학 관련 글을 읽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정치학을 한다고 하면 권력에 관심 있고,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꺾끄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근대한국정치학은 구조, 기능, 제도 등 가시적 현상을 서술하는 데 노력을 치중한 나머지 인식, 의식, 감정 등 내면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 극도로 소홀하였다는”(이흥구 1986, 8)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영토로 삼고, 한국인들에 의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고 살아오면서 고도의 정치행위가 있어왔다. 따라서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정치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오랜 왕정 혹은 전제군주국가의 틀 속에서 '정치권력의 창출'에 대한 이론이 배제된 전통시대의 정치학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정부구성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시각으로 볼 때 전통시대의 정치는 미국식 '과학'으로 취급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정치체제는 아니며, 권력의 창출과 변동을 다루는 것만이 정치학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

시대의 ‘정치적 경륜’ 과 그것에 대한 선인들의 탐구는 여전히 유용한 한국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구한말 유기체론에 입각한 서양 정치학의 수용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³⁴⁾ 이유도 전통과의 접목에 기반을 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IV. 결론

정치는 단순히 ‘가치 또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거나, ‘권력의 유지, 획득 및 확장’ 또는 ‘권력을 통한 지배와 복종의 상호관계’ 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이끄는 ‘공동선을 창출’ 하는 것으로서 정치학은 철학이며, 역사며, 경제며, 교육이다. 곧 역사와 철학을 포괄하는 사람들 사이(人間)의 일의 총체를 말한다. 정치는 사람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 인간관계에 살아 움직이는 도덕 그 자체, 공동체의 덕성과 관련된 모든 인간됨의 표상이다. 오늘날 학문분과로서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는 특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아주 넓은 의미에서 정치의 하위개념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정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행태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정치학회와 선배 정치학자들의 노력은 한국정치학을 세계적 연구수준으로 올려놓기도 했으며 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존 정치학 여러 분야의 성취를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치학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세기 논의에서 한국정치학은 재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분과에 매몰된 정치학의 국지성을 벗어나 총체로서 정치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화(共和)’ 제를 부

34) 결과적으로 구한말 지식인들의 서구 정치학의 수용과 적용 노력은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다는 데 대해서는 장현근·김경희 2011, <4장 구한말 서양 정치학의 수용과 한계 - 사회진화론과 유기체적 국가론>, 165-172쪽 참조.

정하지는 말은 아니며, 한국정치 민주화의 절차적 완성을 부정하지는 발상이 결코 아니다. 한국정치학 뿌리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 다양한 세계정치학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대안적 작용을 할 수 있는 독자적 성취를 이루자는 주문이다. 정치를 총체로 인식했던 전통시대 정치학은 가장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수천 년간 유럽보다 넓은 땅에서 그 두 배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던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륜과 그것을 정의했던 전통시대 정치학은 최근 1세기 남짓한 세월을 지나면서 단절되어 버렸다. 단절의 원인이 서양의 제국주의 경영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 요인과 자발적 요인도 크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은 선견포리(船堅砲利)로 대표되는 물질의 지배로부터 정체성과 주체성의 소멸이라는 정신의 지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권력의 창출'과 연계되는 대의제와 민주주의 중심의 서양,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서양의 논리 속에 전통시대 정치학은 함몰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학 연구는 다시 최한기 시대로 돌아가서 전통과 현대의 접점에 발을 디딜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적 뿌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독자적 성취를 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논의는 열려 있어야 하며 기존, 현존의 모든 정치학자들의 노력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정치학이 한국의 정치학이기 위해서 주체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전통에 뿌리를 둔 독자적인 정치학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각종 교육과 교화를 통해 국가구성원들이 총체로서 '정치'를 인식하도록 담론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제도의 정립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정치사를 역사학의 영역에서 정치학의 영역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서양정치학 도입의 1세대인 안국선 연구를 국문학자(이재선)와 국사학자(이광린)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나, 항상 '서양정치학'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수입학문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적 사유 속에 배태되어 있는 보편적 개념을 추출한 뒤, 서양정치학을 수용하면서 등장시켰던 개념들과 동등한 지위에 놓고 그 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정치학이 한국 지식인들의 지적 변화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근대 한국정치학이 출발하면서 전통적인 총체성으로서의 '정치'를 버리고 분과학문의 하나로서 서양 정치학을 수용한 것은 구한말 국가적 위기와 부국강병

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였던 ‘권력’ 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 한국의 정치학은 결과적으로 한국정치학의 끝없는 위기를 양산했을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는 것인 ‘정치’ 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으로서 한국 정치학의 재건축을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참고문헌】

『墨子』(戰國 墨翟), 『韓非子』(戰國 韓非), 『孫子』(春秋 孫武), 『大戴禮記』(西漢 戴德), 『說文解字』(東漢 許慎).

《十三經注疏》(北京: 中華書局, 1984).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漢 賈誼 원저. 장현근 역. 2010. 『新書』. 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강정인·정승현. 2010.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8집 1호.

고희탁. 2010. “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 과학성, 자율성,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1호.

구범모. 1967.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집.

구영록 외. 1986. 『정치학개론』. 서울: 박영사.

김계수. 1987. 『한국과 정치학』. 서울: 일조각.

_____. 1995. “한국정치 50년과 한국의 정치학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 2호.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김동춘. 1998.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하는가?” 『경제와 사회』 37호.

김석근. 1997.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 과 자기정체성.” 신정현 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서울: 법문사.

김영국. 1977.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 11집.

김영명. 2006.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김운태. 1978. “한국정치학의 연구경향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12집.

김용진. 1997. “한국정치학의 방법론적 위상.” 신정현 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서울: 법문사.

김학준. 1983. 『한국정치론: 연구의 현황과 방향』. 서울: 한길사.

_____. 1987. “우리나라 정치학도입기의 지도적 정치학자 安國善의 주요 저서 소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_____. 2000.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유길준·안국선·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호진. 1994.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 김효전. 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 노혜정. 2005. 『지구전요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사상』. 서울: 한국학술정보.
- 문승익. 1979.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3집.
- 민병태. 1969. “우리 정치학계의 현시점.” 『한국정치학회보』 3집.
- 박충석. 1982.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삼영사.
- 백창재·이소정. 2008. “미국 정치학의 성격과 정치학 교육.”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17집 2호.
- 서병훈. 2000. “한국 정치학, 한국 정치학자: ‘정체성 위기’에 대한 재론.” 『사회과학논평』 19호.
- 서정갑. 1982. “한국 정치학의 반성과 과제.” 『사회과학논집』 13집.
- 서중석. 1967. “한국정치학의 연구 및 교육경향의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2집.
- 石塚正英·柴田隆行 監修. 2004. 『哲學·思想翻譯語事典』. 東京: 論創社.
- 신정완. 2003. “주체적 학자 양성의 필요성과 방안.” 학술단체협의회어음. 『우리 학문 속의 마국』. 서울: 한울.
- 안외순. 2008. “安廓의 조선 정치사 독법: 『朝鮮文明史』를 중심으로.” 온지학회. 『온지논총』 제20집.
- 안청시. 1986.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안청시 편. 『현대 한국정치론』. 법문사.
- 양승태. 2010.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 2011. “문명충돌의 정치와 정치학: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양 정치학 도입과 한국 및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 문제.” 日本 成蹊學園創立100周年記念行事. 2011년도 제10회 한국-일본 정치사상학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역사와 사상』 발표논문집.
- 양승태·안외순. 2007. “安國善과 安廓의 근대 정치학 수용 비교 분석.” 온지학회. 『온지논총』 제17집.
- 유동준. 1987. 『兪吉濬傳』. 서울: 일조각.
- 劉澤華 編. 장현근 역. 2002(2008sd). 『중국정치사상사』(선진편 상/하). 서울: 동과서.
- 윤병희. 1998. 『유길준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이홍구. 1986. “근대 한국 정치학 백년.” 『한국정치학회보』 20집 2호.
- 장현근. 1999. “서구의 충격과 근대중국의 정치사상: 梁啓超의 ‘立憲君主論’과 孫文의 ‘革命共和論’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호.

- 장현근·김경희. 2011. “한국정치학의 뿌리와 서양정치학의 수용.”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 연구의 위기와 기회: 정치학 연구의 위상 재정립과 한국정치발전의 모색』 (2011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영태. 2003. “한국 정치학의 미국 편향성과 한국정치.” 학술단체협의회위원.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서울: 한울.
- 조희연. 2006.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학문적 주체화로 가는 창.” 김정일 외. 『우리 안의 보편성』. 서울: 한울.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지. 2005. 『한국정치사상사: 단군에서 해방까지』. 서울: 백산서당.
- 한국정치학회 편. 2003. 『韓國政治學會五十年史』. 서울: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 함재봉. 1997. “한국정치담론의 어제와 오늘.” 전통과현대사. 계간 『전통과현대』 1997년 가을.
- 香港中國語文學會. 2002.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香港: 漢語大詞典出版社.

투고일: 2012.02.25	심사일: 2012.04.01	게재확정일: 2012.04.12
-----------------	-----------------	-------------------

【ABSTRACT】

Modern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Discontinuity in Recognition of ‘Politics’: Loss of Traditional Wholeness

Chang, Hyun Guen | Yong In University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been stagnant and standstill, and emphasize that Korean political science must reform to create independent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In the introduction, it's explained that the denying of traditional politics and the one-sided acceptance for Western politics caused Korean political science having no identity. The Chapter 2 discusses the traditional meaning of politics as wholeness, and analyze the falling process of politics as partial studies in modern Korea. The Chapter 3 criticize the growing trend of discussing political power only.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appeals a reconstruction of new Korean political science as the wholeness of humane life.

Key Words | Politics, Korean Political Science, Wholeness, Partial Studies, the Creation of Political Power